

2020. 11. 12. [목] 언론보도

경인방송 TVFM

2020년 11월 11일 (수)
종합

경기도의회 평화협력국 행감... 'Let's DMZ' 실효성·방만 운영 질타



김강식 경기도의원. <사진= 경기도의회>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앵커)

비무장지대 DMZ가 지난 '공존'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랫츠디엠지(Let's DMZ) 행사가 효율성 없이 수십억 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랫츠디엠지는 학술행사인 'DMZ 포럼'과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음악 공연 행사인 'Live DMZ', 행사 내 모든 체육행사를 모은 'DMZ 런' 등 4개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난 9~10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는데, 콘서트에 28억 원, 포럼에 12억 원, 체육행사 9억 원, 영화제 30억 원 등 8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단일축제로는 국내에서 손 꼽힐 정도의 대형 축제인데, 그 효과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DMZ에 대한 홍보효과가 극히 미비했고, 지역민들의 참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녹취/김달수 의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방송 한번 하는 이벤트 행사였거든요. 기획자체가 애초부터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또, 특정 방송사에게 외주를 주다보니 타 방송 등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며 이 같은 홍보부실 문제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만한 행사 운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통해 행사 전반을 책임지는 사무국을 만들고도 개별 사업별로 별도 사무국을 만들어 과도한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녹취/김강식 의원]

"경기도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전당이나 관광공사 등 기타 기관 등에서 파견 받아서 TF만들어서 조직을 꾸려도 됩니다. 지금 행사한 거 보세요. 사업내용들 보세요. 그냥 불꽃놀이예요. 어떠한 부분들에서 경쟁적인 효과가 지역사회와 연계됐습니까"

이에 대해 신명선 도 평화협력국장은 "예산이 투입됐던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행감에서는 공기관 대행 사업 등 간접사업 비율이 전체사업 중 84.9%에 달하는 평화협력국의 사업 추진방식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

농업·전염병 등 ‘道 남북공동사업’ 송곳 질의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DMZ 전시관 등 연계 콘텐츠 차별화 필요”

경기도의회 이종인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평2)이 민선 7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경기도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종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도의 북한 농업 피해 지원 등 남북공동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북한 피해에 대해 어떤 지원을 했고, 남북공동으로 한 사업이 있는가”라며 “향후 경기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5대 제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지원은 일부 지원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9월 이후 국경이 완전봉쇄됐지만 미국 정권 교체 이후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 협력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인 부위원장은 “외부 사정과 관계없이 경기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평화 관련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길 바란다”며 “사업을 못한 이유를 외부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추진계획과 관련, 이 부위원장은 “DMZ 전시관, 체험관, 임진각 곤돌라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가 필요하다”며 “캠프 그리브스 관련 콘텐츠의 차별화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역사공원) 근대화적 가치가 있는데도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명섭 국장은 “내년 중 종합적 보존 활용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이 부위원장은 “근대화유산 재생사업을 통해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비군사적 목적도 출입제한, DMZ 유엔사 땅인가

엄연히 대한민국 땅인데도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다. 안보관광 외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을 출입하려면 ‘유엔사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에 따라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파주시도 DMZ 내 시설물 이용,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할 때 유엔사 승인을 받고 있다. DMZ 안보관광지에서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파주시는 지난달 ‘대한민국 땅과 건물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출입하는데 일일이 유엔사 허가를 받는다는 게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유엔사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유엔사는 남북철도 경의선 북쪽 구간 현지 조사 통행, 통일부 차관 등 한독통일자문위 고성 GP 방문, 통일부 장관 대성동 마을 방문(기자단 출입 불허) 등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불허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방부가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제도 개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까지 통제한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가 유엔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파주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는데 유엔사 승인이 없어

무산됐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육군 1사단에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 앞에 몽골식 텐트를 세워 평화부지사와 공무원, 지원인력 등 6명이 상주하겠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고 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추진했다.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고 ‘조건부 동의’했지만, 9일 유엔사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집기 설치를 거부했다. 유엔사는 현재 이 사안을 승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 부지사는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비군사적인 경기도 고유 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관할권 행사는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무관한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 지적대로 부당한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관해서만 승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유권해석만 내놓을 게 아니라 유엔사와 적극 협의해 주권을 찾아야 한다.